

96~97년 총파업 투쟁을 되돌아보며 - 교훈과 반성 -

김호규

(현대정공노동조합 교육위원)

1. 들어가며

지난 1월 20일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3단계 전면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실적 조건과 정치권의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현장에 복귀하였다. 만약 제대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월 18일 4단계 파업이 있을 것을 선언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보(韓寶)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비리는 노동계의 발걸음을 석연치 않게 만들었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현실은 엄중하다 못해 위기감마저 들었다. 황장엽 망명, 이한영 피살로 이어지는 안보북풍은 노동계의 총파업 전선에 칼바람을 들이대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장복귀 이후 무엇을 하였는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을 추스르면서 4단계 파업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4단계 파업의 실상은 울산의 경우, 지역집회도 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져 3단계 투쟁을 했을 때보다 조건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활동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2월 28일 4단계파업까지 달려왔던 울산 지역의 투쟁 속에서 느꼈던 이런 저런 생각들을 현장활동가의 눈으로 적어보고자 한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현장,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활동가의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소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은 만큼, 향후 진전된 노조운동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2. 총파업 투쟁의 교훈과 반성

1) 투쟁적 측면

▣ 노동자들이 뭉쳐서 제대로 싸우면 세상이 뒤집힌다.

-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 즉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실천을 시작하였다.

- 87년 6월 항쟁과는 달리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개악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조직된 제조업 노동자들이 선두가 되어 정치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 항거하였다.

- 각종 여론 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은 실체적으로 인정 받았고, 총파업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다.

- 그러나 아직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초기이고 이후 세와 역량을 불리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 자본가들조차 정치(파업)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적인 흐름이 있으나, 정치투쟁의 목표와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였고 대중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였다.

- 오히려 경제투쟁과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현충련의 경우, 단사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회사측의 위협과 선무활동이 팽창했는데, 이것에 대해 노조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채, 임금인상 때 거론하겠다는, 정치파업이다 보니 회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식의 어설픈 설명도 있었다.)

-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현실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시키는 구체적인 상이 없고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이 거의 없었다.

▣ 민주노총 중앙이나 현충련은 이번 투쟁을 통해 지도력이 분명히 강화되었고 대중적 명망도 얻었다. 그러나 투쟁의 최일선에 있는 중간 활동가는 오직 민주노총 지침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무슨 내용으로 대중들을 만나고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설령 계획을 세워서 지도부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의견이나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면 단결을 해치는 분위기로 물리는 분위기조차 있었다.

2) 조직적인 측면

▣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연대활동의 부재.

- 울산하면 현충련으로 대표되는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노조를 앞당기겠다고 한다면 그 덩치에 걸맞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례: 민주노총 가입을 공언한 울산 남부지역 동양나이론 -최근 효성T&C로 회사 이름을 바꿈- 노조가 파업열기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사측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투쟁본부에 '퇴근시 정문앞 공동집회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못한 점)

- 이후 민주노총 중앙이나 각 연맹의 지역단위에서는 미조직 사업장과 조직이 약한 단위노조에 대한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지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활동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 **일상활동 시기에 현장을 찾으면서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이 생명
력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 현자노조와 현중노조로 대비되는 울산지역의 총파업 모습은 앞으로 노조운동에 있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아마 이 점에 대한 논란과 평가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올바르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현자노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히 이것을 기준으로 현자와 현중의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본의 다양한 노조무력화 전략에 맞서 현장을 노조 중심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서 조직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내는 것이 건강한 노조활동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3) 내용적인 측면

▣ **노동악법철폐,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성과는?**

(1) 노동법 개정의 약속을 끌어냈다.

민주노총에서 2월 18일 전면 총파업에서 투쟁수위를 낮추어 ‘수요파업, 토요일집회’로 전환하기로 선언한 직후 2월 21일 정부는 청와대 영수회담을 열어 노동법, 안기부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였다.

완전히 무효화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로부터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특히 영수회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 그러나 노동법 개정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어가 버렸다.

20여일의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완전무효화를 이루어내지 못했

을 뿐 아니라 구체적 개정내용을 쟁취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재개정 논의마저 투쟁의 주체였던 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수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한계는 너무나 뼈아픈 것이다.

이것은 3단계 총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를 완전히 빼앗기고 패배의식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는 얼마나 쌓아졌나?

(1) 산별노조 건설에 긍정적인 측면

ㄱ. 조합원 대중에게 단결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

노동악법의 철폐라는 목표를 완전히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재개정 논의를 이끌어 낸으로써 전국적 총파업의 위력, 노동자가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진리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전국의 노동자가 총파업과 지역집회를 통해 서로 만나고 부대끼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투쟁을 하면서 짙은 동지애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실감함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벽을 뛰어 넘어 산별노조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ㄴ. 중앙지도력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번 총파업 투쟁에서 주요한 투쟁전술과 방침은 모두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에서 나왔다. 단위노조의 지도부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산별노조의 건설은 중앙지도력의 확립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기업별 노조의 지도부가 중앙을 믿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한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의 유지에 집착하여

기업별 노조를 고집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총파업을 통해 단위노조 지도부나 조합원들 사이에 중앙지도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2) 산별노조 건설의 부정적인 측면

ㄱ. 일부 대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의 투쟁방침 결정을 주도하였다.

12월13일의 경고파업 성격의 1일 총파업의 유보한 것, ‘수요파업, 토요집회’로의 전환과 철회 등 민주노총의 주요한 방침의 결정은 투쟁 동력이 강한 일부 연맹이나 대기업 노조의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총파업의 주요동력인 대기업 노조의 현장 상황이나 정세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이것이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기는 하나, 산별노조 건설이 일부 사업장 노조의 주장이나 참여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산별노조 자체가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 대기업, 중소기업의 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ㄴ. 각 지역별 지도구심이 형성되기보다는 소외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총의 중앙 투쟁방침을 지역에서 구체화하는 과정도 각 지역에서 지역의 지도구심을 형성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 집행해가기 보다는 대체로 일부 투쟁동력이 왕성한 노조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이었다.

울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집회 여부, 내용 등 주요한 부분이 지역 투본 회의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일부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결정해 가는 식이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다른 노조에도 그 책임이 있지만 이번 총파업 투쟁이 몇몇 단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노동자의 문제였고, 또 향후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노조들을 격려하면서 지원하면서 집회와 지역투쟁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결과, 투쟁이 끝난 후 단위노조 사이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은 산별노조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토대는 얼마나 쌓아졌나?

(1) 긍정적인 측면

ㄱ.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을 엄청나게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투쟁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여야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고 특히 사전 구속영장의 집행까지도 보류하게 만들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존재를 인식하고 민주노총의 위력, 노동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에 기초가 되는 대중투쟁이나 정치활동을 보다 힘있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ㄴ. 사회개혁 투쟁 등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가능하게 했다.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파업을 어느 정도 성과 있게 경험함으로써 사회의 제반 구조적 문제들 -재벌문제, 세금문제, 사회복지 문제 등- 에 대해 조합원 대중의 참여 -집회, 시위, 파업 등- 를 조직할 수 있는 분위기와 토대는 마련되었다.

이는 향후 대중투쟁을 기반으로 보수정치의 틀을 깨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인 측면

ㄱ.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기간 내내 모든 집회에서 ‘김영삼 퇴진’, ‘신한국당 해체’를 외쳤지만, 구체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어떤 노동자는 이를 97년말 대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를 찍지 않는 것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노동자는 독자적인 후보출마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번 날치기 노동법 사태와 관련하여 보수 야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민주노총이 이러한 보수야당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견인해야 할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ㄴ.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

산별노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물적 토대가 된다.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 노동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별노조는 계급성을 바탕으로 하는 노조조직 형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급성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자 정당의 인적, 재정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분명히 선전선동되지 않았고 총파업 투쟁의 목표로 제시되지 않아 정치세력화 필요성은 느껴졌지만 어떻게 정치세력화해야 할 것인지는 대중들이 알 수 없었다.

3. 총파업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 다시 한번 12월13일 총파업 유보 문제에 대하여

▣ 정세인식의 차이가 매우 컸다.

(1) 잘못된 정세인식

ㄱ. 연내 처리 불가능하다는 정세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연내처리 불가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야3당의 반대와 해당 상임위의 여야 동수,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 등이나 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자본과 정부, 즉 총자본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법개정 국면에서 줄기차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만 경제를 살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면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요구는 더욱 거세져 왔다. 김영삼정부도 '세계화'를 외치면서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여 왔다.

이런 상황은 야3당의 반대와 국회법의 절차규정을 무시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를 강행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나. 잘못된 정세판단은 계급의식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총파업유보 주장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얼마나 심각히 대립해 왔는지 의식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즉 계급의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것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이 노동법 개정에 얼마나 힘을 쏟고 로비를 벌이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2) 공안정국 조성파 민주노총 와해를 위해 총파업을 유도한다는 음모설은 비과학적인 인식이다.

가. 음모설을 믿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분단상황

을 구실로 공안세력이 언제든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총파업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쥐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안정국 조성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주장은 조합원대중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행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정보에 의존하는 음모설은 비과학적인 인식이다.

노개위 국면이 시작되면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정부 혹은 청와대와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혹은 조직적 접촉을 통해 입수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공안세력이 총파업을 유도한다는 심증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정보는 그것을 흘리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는 지도자는 노자관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3) 결과가 좋았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ㄱ. 이번 총파업 투쟁은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다.

이번 20여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법 재개정의 약속을 받아냈고, 부수적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높였고, 조합원 대중에게 단결하면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했고, 그래서 향후 정치적 대중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단히 큰 성과를 올렸다.

ㄴ. 그렇다고 총파업 유보를 정당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부 사람들은 12월 13일의 총파업을 유보한 것이 정부로 하여금 날치기를 하도록 하여 전 노동자의 분노와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모아 국

민적 명분을 갖고 총파업 투쟁을 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떠나 이는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추는 식이다.

만일에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내부역량이 20여일간의 총파업을 강고하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을 것이다.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 현장 내부 조직력의 와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㉔. 우연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투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번 20여일간의 총파업 투쟁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의 총파업에 대한 선전선동과 현장의 준비, 그리고 노동자들의 위기감과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 등 우리 내부의 투쟁동력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밖에 노동자와 국민을 앞잡아보아 저질러진 날치기 수법, 그리고 노동자의 총파업과 국민의 분노가 진동하는데도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핵심 투쟁동력인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분노만 높여준 사측의 휴업조치 등 총자본측의 헛발질이 우리의 투쟁을 도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측의 헛발질로 인한 반사이익을 냉정하게 평가하여야지 과대평가 하여서는 안된다.

▣ 대중의 역동성을 꺾이게 하지 않는 선에서 투쟁을 지도해야 한다.

나 자신이 현장에서 노조운동을 하면서 배운 투쟁의 원칙이 있다면 지도부는 조합원 위에 있지 말고, 항상 조합원 속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래야만 조합원의 정서를 세밀히 읽을 수 있고, 투쟁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떠한 싸움이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즉 맞장 떼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내가 지는 싸움이

라 할지라도..)

그리고 쇠는 별정계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 강해진다는 말처럼 분위기와 조건이 좋을 때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을 보면서 집회든, 거리행진이든 간에 대중들이 모였을 때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대중들을 역동적으로 지도해 내면서 내용적으로 의식화와 조직화를 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다.

▣ 이제 울산지역은 민주집중제 방식을 지도부든 현장 활동가든 반드시 몸으로 체화해야 한다.

울산지역 노조운동이 더욱 전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토론과 비판이 자유로워야 하며 어떠한 의사결정이든 그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제시 속에서 하나의 결정으로 집중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 지역 노조운동의 지도중심은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4. 덧붙이는 말

어제 4단계 파업을 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부분파업으로 자동차, 정공, 프랜지가 참여하였다. 현장의 한 동지가 이런 말을 한다. “단계별로 파업을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자꾸만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지 모르겠다.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 수와 내용이 발전하지 않아서인가...”

또 다른 동지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임금인상과 결합시키는 구체적인 상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리해고제같은 내 발등의 불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제 임금인상 투쟁은 집행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정도로 겨우 따라가는 자세일 것이다”라며 활동가로서의 비참함을 호소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도부와 대중을 이어주는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활동가들을 버티게 하고 전망을 갖게 할 것인가?

나 자신도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이 결국 대중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대안은 또 생겨날 것이다.

끝으로 다짐해본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노개투 싸움은 반드시 총단결, 총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노동자집회**